

영국 에너지정책의 현안

Energy Policy Issues for the U.K.

영국에너지협회(BEA)

이 자료는 지난 5월 영국에너지협회(British Energy Association)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및 이용과 관련 최근 집권한 노동당 정부 및 기타 이해당사자들에게 영국 에너지산업계의 당면문제와 에너지정책 수립시 반영되어야 할 주요사안에 대해서 업계의 증지를 모아 작성, 발표된 것이다. BEA는 WEC 영국국내위원회와 동일한 조직이다.

영국 에너지정책의 기본 목표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에너지를 안정적이면서 경쟁적인 가격에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영국에너지협회(BEA)는 기술혁신 촉진, 비용절감, 효율성 제고, 소비자 선택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경쟁적인 에너지 시장이라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외에서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에너지시장 개발을 계속 촉진시켜야 하며, 안정적인 법적·제도적 체계 속에서 이루어져 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BEA는 이 같은 목표가 가능한한 영국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시장원리에 의한 접근방법은 에너지가격을

낮추고, 효율을 향상시키며, 환경오염 배출물을 감소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지만, 아직 해결되어야 할 것이 많다. BEA는 영국의 에너지정책 목표가 미래를 위해 성공적으로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정부가 다루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다.

환경목표

BEA는 경쟁시장과 자유무역의 발전이 환경목표 달성에 필요한 투자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나 규제행위는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야 하며, 비용/편익분석에 의해야 한다. BEA는 오염자 부담원칙과 시장의 기능을 보다 많이 활용하는 추세를 지지한다. BEA는 또한 일어날 수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비용효과

적인 예방조치를 지지한다.

정부는 에너지생산 및 공급과 관련한 비용과 편익이 에너지시장에서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BEA의 견해로는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점진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쟁가격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공급을 촉진시킬 잠재력을 가진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시행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외부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세금을 올려 에너지가격을 인상시키는 것은 에너지제품에만 이것이 적용될 경우 왜곡된 시장을 바로 잡을 수 없다. 에너지세는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최선의 비용 효과적인 수단임을 입증한 후에 도입되어야 한다. 즉 영국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주요 교역상대가 어느정도 유사한 부담을 지고 있는가, 저소득 가계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다른 방법으로 확보함으로써 에너지세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갖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에너지 효율

에너지이용과 관련하여 효율향상 잠재력은 상당하다. 시장의 율타리속에서 효율향상 촉진정책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공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보다 효율적인 장비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에너지와 에너지효율 제품간의 불균형을 낮게하는 왜곡된 조세부과의 제거,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방해하는 시장이나 기타 장애물 제

거 등이 있다.

신재생에너지

NFFO 체제하에서 재생에너지 시설용량이 상당히 증가했고, 전기소비자들에게는 점진적으로 비용을 낮추어 주는 역할을 했다. BEA는 재생에너지나 여타 기술이 경쟁력있는 가격에서 지속적으로 에너지공급을 할 수 있도록 과도기적인 지원을 계속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연구개발

정부는 현재 국내외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의 방향이나 수준이 영국의 에너지정책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영국 자체의 R&D 노력이 에너지생산 및 이용효율 향상과, 지속가능한 에너지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나 여타 기술의 단위비용 감소를 제고시키고 보다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은 환경오염 배출이 적으면서發電이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 영국은 원자력이 에너지수요에 계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국내에서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중에 원자력발전의 장기적인 이용가능성 유지를 충분히 반영시키고 있는지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여기에는 운전상의 안전성, 단위비용 감소, 방사성 폐기물 처리의 만족스러운 방법개발 등도 포함된다.

수 송

효과적인 수송시스템은 경제적인 행복과 삶의 질에 필수요소이다. 정부는 수송인프라 투자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야 하며, 시장왜곡으로 공공수송이 민간수송 부문에 악영향을 미치도록 해서는 안된다.

현재와 같은 유형의 자동차 이용이 발생시키는 악영향을 가정할 때, 정부는 수송의 공동이용 방안을 증진시키고, 보다 효율적이고 오염배출이 적은 자동차와 수송양식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유럽연합

유럽연합(EU)의 에너지정책 목표는 영국의 정책목표와 일치하게 즉, 고객들에게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안정적이면서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공급을 해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별국가나 IEA같은 국제기관이 도입한 기존의 조치보다는 보다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EU 수준에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EU 테두리속에서 영국 정부의 정책 시행의 초점은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에너지시장의 도입을 가속화시키고, 보조금 지급을 제거해야 한다.

영국의 산업경쟁력

영국 경제의 경쟁력이 영국 에너지정책의 주요 동력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에너지정책은 경쟁적인 에너지시장 개발을 통해서 에너

지가격 인하와 효율향상을 계속 촉진시켜야 한다. 환경정책 수단은 영국의 산업경쟁력의 수준을 고려하는 완전비용(full-cost) 편익분석에 따라야 한다. 비용효과적 수단이 영국의 산업과 경제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밝혀질 경우에는, 영국의 주요 국제경쟁자들의 상황을 보아가면서 이러한 수단이 도입되어야 한다.

영국 에너지산업의 국제경쟁력

WEC는 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한 에너지사용 증가와 환경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해 선진국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세계적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영국의 에너지산업계는 보다 효율적인 플랜트 및 장비를 공급하고, 여기에 투자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에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영국의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청정화석연료, 오염배출 저감기술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그러나 OECD의 다른 회원국들 정부에서는 자국 기업들에게 재정적 또는 다른 형태의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영국 산업계가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자주 목격한다. 영국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a) 보조금 지급이 폐지되도록 WTO와 같은 국제기관을 활용하여 민간부문의 수출과 투자를 국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시키라.

b) 영국 정부는 해외사업 진출시 역시 해외 사업에 나서는 타국정부와 효과적으로 협력하라.

c) 지속가능한 세계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영국 정부가 일원이 되는 국제협약이나 영국의 자체적인 해외개발에서 발생하게 되는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프로그램(예, 공동이행활동)에서 영국산업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라.

영국 산업계가 그 역할을 확대시키기 위한 정책에는 다음 두가지의 현실이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 첫째, 민간투자 유입은 기술과 자금을 확산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충분한 수익률을 필요로 한다. 둘째, 혁신이 권장되고 보상을 받게 하려면 지적재산권이 보호되

어야 한다.

정부조직

경쟁적인 가격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공급을 달성하려는 영국의 에너지정책목표는 여러 정부 부처 및 경제, 환경관련 규제기관의 주요 과제이다. 동시에 영국 정부는 에너지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여러 국제조약, 국제협약 및 의정서의 일원이다. 정부는 여러분야의 목표 추구가 일관되고 조정될 수 있도록 정부조직에 대한 검토를 해야한다. ☞

영국 노동당정부, 에너지정책 보고서 발간

지난 5월에 치루어진 총선으로 그동안 발간이 지연되어 온 영국 정부의 에너지 관련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동 보고서는 노동당 집권 이후 에너지정책에 대한 신정부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영국의 에너지정책 기조와 세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수록하고 있다.

노동당 정부 에너지 정책의 주된 이슈는 연료유에 대한 부가세 인하, 가스세 폐지와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비율을 높이는 등에 의해 2010년까지 발전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20%까지 줄인다는 것이다.

국내 연료유에 대한 부가세는 현재의 세율 8%에서 5%로 인하하고 열단위당 4펜스인 가스세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발전부문은 현재 300TWh를 넘는 발전규모에서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비율을 확대하여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감소시켜 나간다는 목표이다.

이를 위해 영국정부는 석탄발전과 가스발전 등 기존 화력발전을 억제하고 열효율이 80%가 넘는 열병합발전 등을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동향 97.9. 에경연)